

# 대학 2학기 수업방식, 온라인 중심 오프라인 병행 '무게'

(브랜드리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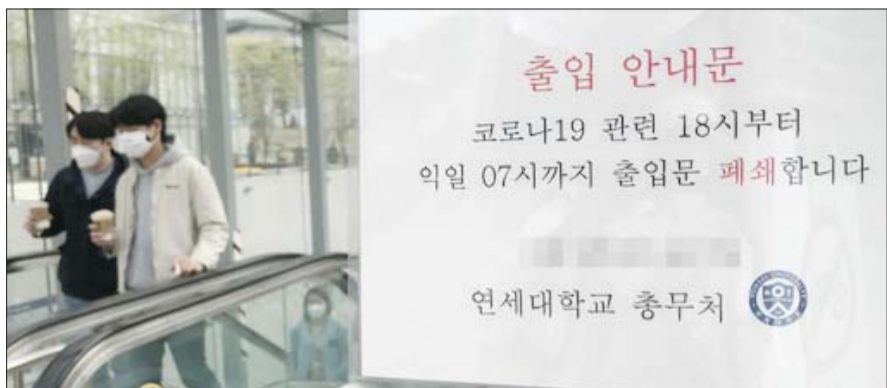
수업 질 개선 위해 인프라 확충 주력

코로나 확산세 예측 불가 상황에 단계별 학사운영안 구성 대학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이 2학기 수업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브랜드리닝'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대는 확산세에 따른 단계별 학사운영안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특히 대학가는 지난 1학기 등록금 환불 논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수업 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면 수업 일부 확대, 서버 증설 등 인프라 확충과 강의실 제고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5단계 학사운영(안)을 마련했다. 일일 확진자 수가 10~50미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현재 상황에서는 대면 수업과 비대



지난 5월 연세대 교내에 '코로나19 관련 출입문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메트로신문 DB

면 수업 병행하는 'Phase 3'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대는 학부 실험실습, 실기 수업과 대학원 수업은 교육부의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원 수업의 경우, 필요 시 비대면 수업을 병행한다. 학부 이론수업은 소규모 강의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대면 수업을 하고, 필요한 시그를 나눠 순환 출석하는 방안도 시행 예정이다.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혼합형 수업도 가능하다.

중앙대 관계자는 "하루 확진자 규모

에 따라 현재 상태를 3단계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대면·비대면 수업 병행을 예고했지만 2학기 개강 이후 확산세가 심화하거나 약해질 경우 상황에 따라 전면 비대면 혹은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양대와 연세대로 2학기 비대면·대면 혼합 강의 방식을 도입했다. 한양대는 '2020학년도 2학기 서울캠퍼스 학부 수업운영 안내'를 통해 수강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이론 강의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되, 실습이 필요한 경우는 대면수업으로 진행한다는 방침

을 밝혔다.

연세대도 개별 교과목을 온·오프라인 혼합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3학점 수업의 경우 '2시간 온라인+1시간 오프라인' 또는 '1시간 온라인+2시간 오프라인'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수강 정원 71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 온라인 수업을 권장하기로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다만 감염병 사태가 악화할 경우 모든 수업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명지대도 2학기에도 1학과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되, 실습·실습·실기 교과목은 대면수업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도 비대면 강의를 올해 2학기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라 2학기에도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주요 대학을 주축으로 비대면 강의가 계속될 조짐을 보이면서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 고도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학기 온라인 강의의 최대

한계로 꼽힌 '강의 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중앙대는 온라인 강의 전용 스튜디오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교수가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촬영하면 수업 품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강의 받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성적 등 온라인 강의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는 방안도 수립하고 있다.

고려대도 2학기에 강의실에서 곧바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카메라 등 인프라를 구축 공사를 하고 있다.

연세대는 온라인 강의 운영 지침을 다듬었다. 2학기 온라인 수업에서 사전 녹화된 동영상 강의나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하는 것만 허용하기로 했다. 단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워드·PDF자료 제공으로 온라인 수업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앙대 관계자는 "교육부도 그간 20%로 제한했던 원격 수업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대학도 이에 맞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단국대, 등록금 반환 동참... 1인당 최대 54만원

1학기 등록금 10% 학생 반환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

단국대가 1학기 등록금의 10%를 학생들에게 반환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계열에 따라 1인당 34만에서 최대 54만원씩 등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단국대(총장 김수복)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원장학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수혜 대상 학생 약 2만 1000명이다. 개인당 등록금의 10%를 돌려주며, 전체 장학금액은 약 77억 7000만원이다.

단국대는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 방안을 놓고 지난 5월부터 2개월에 걸쳐 ▲학생 대표 간담회 ▲등록금심의



단국대 상징탑 /단국대

소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8차례 회의를 통해 학생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이에 앞서 대학 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행정부서 예산 10%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며 재원을 준비해왔다.

또한, 비상 상황으로 인해 연기·취소된 국제교류 및 학생 문화행사, 시설 관리비 등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여기에 이번 학기 성적평가 방법 변경에 따른 각종 장학금도 재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상배 총동창회장이 대학에 기탁한 2억원을 비롯, 동문·교수·직원들의 후배 돕기 장학금이 담지하고 있어 예비적으로 비축해왔다.

이번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2020학년도 1학기를 등록한 학생 약 2만 1000명이며 계열별로 최소 약 34만원에서 최대 약 54만원을 돌려받는다.

오는 8월 졸업예정자에는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고, 2학기 등록자에겐 수업료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이현진 기자



전국대학 계약학과관리자협의회 정기총회 /인천대

## 전국 44개 대학, '계약학과' 관리 나선다

전국대학 계약학과 관리협의회 발족 계약학과 질 관리·제도개선 등 추진

전국 44개 대학이 '계약학과' 질 관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협의회를 발족했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인천대·한국산업기술대·순천향대·명지대·공주대·한밭대 등 전국 44개 계약학과 운영 대학이 지난 8일 '전국대학 계약학과 관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했다. 초대

회장교로는 인천대가 선출됐다.

'계약학과'는 산학협력활성화 및 '선취업 후학습'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대학교와 산업체간 협약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2004년 계약학과 제도가 도입된 이후 17년만에 발족된 협의회는 '계약학과 담당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계약학과 질 관리 제고, 계약학과 제도개선 연구'를 주된 설립취지로 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 서울과기대-한국석유관리원, 업무협약 공동연구·인재양성 등 상호 협력 추진

서울과학기술대는 7일 한국석유관리원과 '기술인력 양성 및 학술·연구 진흥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앞으로 ▲공동 연구 및 산학협력 수행 ▲교육 및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전문인력 상호교류 및 양성 ▲지역사회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훈 총장은 "우리나라 석유시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유대체연료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미래에너지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관계를 맺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오른쪽)과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과기대

공동 연구 및 인력양성 등에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서울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명예이사장이 수년간 공금 40여억원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휘문고등학교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교육청은 9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의 배임과 횡령, 횡령방조 행위는 자사고의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행위"라며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심각한 회계 부정이기 때문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 전국대 학생들,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표

전공수업 연계 7가지 정책 제안 발표

"이런 게 바로 시민정치, 풀뿌리 민주주의이지요."

전국대 학생들이 전공 수업과 연계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행정부처·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방치된 공공전화 부스를 간판식 판매 '미니 스토어'나 'LED 홍보부스'로 활용하거나, 시각장애이용 횡단보도 음향신호기에 종료 전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하는 등 시민 생활을 위한 독창적 정책 아이디어들이다. 전국대는 정치외교학과 학생 30여명

이 7일 오후 서울 광진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전공 교과목인 '시민정치론' 수업과 연계해 지난 1학기 동안 진행한 '광진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책 아이디어 제안' 프로젝트 결과발표회를 열고 7개 팀으로 나눠 진행한 7가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전국대 학생들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 시범 실시 ▲교통혼잡 해소 위한 AR(가상현실) 기술 이용한 '가상의 택시 승차대' 설치 ▲시각 장애인에 위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개선방안 등 지역민원 문제와 생활불편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독창적 아이디어와 제안을 내놨다. /이현진 기자